

지만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되기 전 법원의 문턱이 높았고 일반인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웠던 점에 비해 언론중재제도로 인해 무료로 간편히 언론사에 접근할 수 있어 수용자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언론중재제도를 언론자유의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기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론사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보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단점만 보도할 경우 편파보도가 됩니다. 편파보도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신청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러한 관점 등을 고려하여야 새로운 의미의 언론자유가 신장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Free Press 같은 단체의 조사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도가 10여 년 전 2~30위에서 60위권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찰과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 남 태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장)

- 2014년, 세월호 사건 관련 보도에 대한 청구건수 급증

토론회 자료집 12페이지에 연도별 사건 추이가 있습니다. 2013년에는 2,433건이었으나 올 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7,498건으로 되어 있고 11월 26일 현재 12,0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 세월호와 관련된 보도가 많았는데 이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 유병언 씨의 유족들이 신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11월 26일 현재 관련된 청구 건수가 10,375건입니다. 도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 수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주요 신청내용을 보면, 먼저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오대양 사건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오대양 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 있다는 기사가 많았는데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주장으로는 검찰 수사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이 복음침례회를 설립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청해진 해운 소속 직원들이 구원파가 아니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언 씨의 유족들 입장에서는 유병언 씨가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복음침례회의 목사로 재직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신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0,000건이 넘는 사건을 어떻게 중재위원회가 처리할 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위원회에서는 각 매체별로 다수의 사건을 묶어 쟁점별로 한, 두 차례 정정보도를 하게 하거나 연관된 다른 사건도 묶어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교육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에서는 두 개의 교육팀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학·기업 등 일반인 입장에서 언론피해구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후구제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언론사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판례와 언론조정중재사례를 근거로 어떤 때에 분쟁이 발생하는 지를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교육을 받으시면 언론인들께서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내년에는 부산·광주와 같은 광역권을 기반으로 지역교육센터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산·경남지역에서는 교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지역별로 출장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필요시 기업·대학·매체별로 전문 강사진을 보내 최선을 다해 현장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